

(별첨)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2024. 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I . 기본 운영 방향

1. 목적

-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1항은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법 §30조의2·4) 위반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동조 제2항은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제1호), 상당한 주의 여부(제2호)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동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원등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지침 마련

2. 운영 원칙

- 임원등이 본인의 업무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자기책임을 부담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의 경위·결과·정도 등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 여부* 등에 대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

* '상당한 주의' 관련 적용례는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의 책무, 실제 내부통제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필요

II. 세부 판단 기준(고려요인)

1 위법행위 고려요소 (경위·정도·결과, 법 § 35의2② i)

- ◇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시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 위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를 감안하기 위한 세부 고려요소 제시
- ※ <참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별표> 참조(이하에서 같음)

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 ①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등이 **관리의무**(법 §30조의2·4)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관리의무를 未이행하였는지 여부

※ 적용례 및 과거 제재 사례

- ☑ 정기검사 등 과정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거나,
- **점검 항목·주기·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내부통제등에 대한 점검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 <예> 점검항목을 'OO 내규의 준수 여부',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설정, 점검항목별 점검 주기를 업무의 중요도, 위험도 등 감안하지 않고 설정한 경우
- ☑ **(OO은행, DLF 불완전판매)** 준법감시부는 '17~'19년중 WM그룹이 펀드 판매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해 사모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증대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출시 전 법률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여부 위주의 점검만 한 차례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점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DLF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지 못함**

- ②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임원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상 방침, 담당조직의 사업목표·계획 등의 달성을 위하여 위법행위를 지시·묵인하거나 조장·방치하였는지 여부

※ 과거 제재 사례

- ☑ **(OO은행, DLF 불완전판매)** WM그룹은 펀드 판매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연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상 자산관리 상품 판매 배점을 높게 부여하는 한편, 영업본부·영업점별 **펀드판매목표**를 설정하여 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함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 사태 초래

- ③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위법행위가 다수의 부서·점포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특정 부서 또는 점포에서 조직적 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 과거 제재 사례

- ☑ **광범위한 위법 사례(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점포수	불완전판매 금액	불완전판매 건수
OO은행	90개	2,712억원	867건
△△은행	180개	1,601억원	511건
■■은행	67개	522억원	226건

- ☑ **(OO증권, 특정 점포의 집중적 위법행위)** △△WM센터 직원 12명은 일반투자자(440명)에게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독점 판매(2,898억원)하면서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초래

* OO증권은 △△WM센터장의 주도하에 상품 소싱을 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영업점에 판매권한 미부여

- ☑ **(OOOO증권, 특정 부서의 조직적 위법행위)** 전략영업본부는 (주)△△△이 다수의 해외선물 거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불법계좌대여(실제 개인투자자를 동 법인의 주문대리인으로 지정)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87개), 매매주문수탁 등의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여계좌를 통한 차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

* 다수 계좌개설 및 주문대리인(실제 개인투자자) 지정, 법인계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금 지원, 법인계좌 활성화에 대한 수익기여분석, 주문대리인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

- ④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 과거 제재 사례

- ☑ **(OO은행, 장기간 횡령행위 발생)** 직원 A는 기업개선부 근무중('11.11월~'18.7월, '19.9월~'22.4월) 기업구조조정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동 부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중이던 기업자산 매각 계약금 중 몰취금 등 697억원을 '12.6월~'20.3월 기간중 총 8회에 걸쳐 횡령

- ☑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소위 작업대출) 부당 취급행위의 지속적·반복적 발생)**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여심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용도와 유용목적, 증빙서류의 위·변조 사실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의 차입 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 마련업무 등을 소홀히하여 차주의 용도와 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

금융회사	취급 금액 (건수)	위반 기간
OO저축은행	1,623억원(767건)	3년 1개월
△△△저축은행	4,720억원(1,095건)	2년 6개월
■■■저축은행	4,412억원(1,451건)	1년 8개월

⑤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동종·유사 민원의 대량 발생¹⁾ 여부, 유사 위법행위의 재발²⁾(해당 위법행위의 발생일³⁾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문제제기⁴⁾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

- 1) 감독당국·금융회사에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접수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
- 2) 유사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위법행위의 양태, 원인, 금융상품의 유사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3) 여러 차례에 걸쳐 위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위법행위 기준
- 4) 내부의 보고·제보, 언론 등 외부의 문제제기 등을 포함

※ 과거 제재 사례

- ☑ **(OO은행, DLF 불완전판매)** 상품출시의 적정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을 선정·판매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초래
* OO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해외금리연계 DLF의 판매와 관련하여 200건의 민원이 제기됨
- ☑ **(OO지주, 사모펀드 사태)** '19.7월 언론보도를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로부터 △△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 특정 상품에 관한 위험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은행의 WM사업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은행의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 ☑ **(OOOO자산운용, 횡령행위 재발)** OOOO자산운용은 '18.12월 前 대표이사 ■■■의 업무상 횡령('13.2월~'17.3월) 등으로 인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표이사 △△△의 업무상 횡령행위('18.12월~'20.4월) 재발

나. 위법행위의 결과

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이용·유출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위반 규모 등이 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예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 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Ⅲ-5) : 판매금액 100억원 또는 판매건수 500건 이상
 -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유출(Ⅰ-5) : 위반결과가 중대하거나 정보 보호대책의 수립·운영 등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중대한 경우(위반결과는 보통 이상)

※ 과거 제재 사례

☑ 주요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상품	불완전판매 금액	불완전판매 건수
OO증권	특정금전신탁(계열사 발행 CP·회사채 등 편입)	6,544억원	26,210건
△△은행	해외금리연계 사모펀드(DLF)	880억원 USD 539만불	427건
■ ■ 은행	◎◎ 사모펀드	794억원	141건

☑ 주요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례

금융회사	위법사실	유출건수
OO은행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2,965만건
△△카드		1,798만건
■ ■ ■ ■ 카드		4,082만건

②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중대하게 저해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 기관에 대한 제재사유 중 중한 조치인 인·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참고 (검사제재규정 §17①)

※ 과거 제재 사례

- ☑ (OO자산운용) 사모펀드운용사인 OO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의 부실 은폐, 자기 또는 제3자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정가액평가 미 실시, 자전거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OO자산운용의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고 펀드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③ (금융시장 질서 훼손)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또는 건전한 영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 과거 제재 사례

- ☑ (OOOO자산운용) OOOO자산운용은 실제로는 부동산, 부실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기 위해 투자 제안서에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투자자를 모집한 후 다른 펀드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펀드 돌려막기)하거나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업무상 횡령)하는 등 사기·횡령 등 범죄행위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례) 과거 해외금리연계 DLF 불완전판매, OO·△△△△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는 판매업자(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고위험상품을 무분별하게 운용·판매하고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투자질서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2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상당한 주의, 법 § 35의2② ii)

- ◇ 행위자의 책임과 관련한 요소로서 임원등의 제재조치 감면을 위해 관리의무의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제시

가. 예측가능성

-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등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 통상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리한 결과 위법행위 등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 결여

나. 결과 회피

- 예측가능하였던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회피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조치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
 - ※ 위법행위 등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였던 경우에도 개선, 시정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충분하게 관리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 결여

※ 아래 제시된 개별 적용례는 주요 예시로서 감독당국은 실제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각 긍정적·부정적 요인으로 제시된 사례는 상호 간 반대의 사례로도 고려 가능 (예컨대, 부정적 요인의 반대 사례는 긍정적 요인 사례로도 적용 가능)
- 원칙적으로 임원등에 공통 적용되며, **대표이사에게만 적용되는** 고려요인 또는 사례의 경우 **별도 표시**

①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예측 가능 여부, 책무의 추가·변경 시 적절한 리스크 파악 노력 등

※ 적용례

- ☑ **(부정적 요인)** ① 신규 임명 또는 인사이동, 조직개편 등에 따라 책무의 추가·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 내부통제 취약점 등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여 잠재된 위험요인 등을 예측·인식하지 못한 경우

* <예> 전임자로부터 업무현안별 위험요인, 취약분야 등에 대한 인수인계받은 사항을 문서·기록에 의해 관리·유지, 실무 부서 직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리스크 현안 파악 노력 등

- ②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었거나, 내부의 보고 또는 언론 등 외부의 문제제기, 감독당국의 지적·안내 등을 통해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긍정적 요인)** ① **대표이사**가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서의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상품 등의 기획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예상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였음이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예> i) 성과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무리한 실적 독려로 인해 위법행위(불완전판매, 무단 계좌·카드 발급 등) 가능성을 총망라하고 이에 대한 점검·통제 방안을 마련 후 조정 ii) 펀드 등 비예금상품의 취급 수수료 급증, PF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 등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 등과 관련하여 이상징후 발생 시 내부통제 등 전담부서를 통한 판매·영업 실태점검 지시 등

- ② **대표이사**가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예상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이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예> i) 장기간 동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순환근무 확대 및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등 ii) 여러 점포 등에 걸친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실적 점포, 고령자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별도 판매실태 점검 실시 등

- ③ 타사의 금융사고, 금융상품(금융투자상품, 보험 등) 불완전판매, 특정 영업부문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이미 금융당국이 검사를 착수하였거나 검사 결과 제재가 확정된 것을 인지한 후, 그와 유사한 상품, 영업부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노력을 한 경우

②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효과적 집행·운영 및 준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점검체계의 구축 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등의 효과적 집행·운영·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 소관 책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점검, 문제제기 등 여부, 점검 결과에 대한 합리적 조치 여부 등

[대표이사] ①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의 적시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보·보고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여부,
 ②개별 임원이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③잠재적 위험 요인 또는 취약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적 실패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 적용례

☑ **(부정적 요인)** ① 내부통제기준등의 집행·운영·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추상적·포괄적·일률적 기준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는 등 내부통제등에 대한 점검의 외관은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어 사실상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 i) 점검항목을 'OO 내규의 준수 여부',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설정하거나, ii) 점검항목별 점검 주기를 업무의 중요도, 위험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설정한 경우업무의 중요도 및 특성(발생 빈도, 복잡성, 거래규모 등), 위험 요인 등에 따라 점검 항목·주기(단기/장기/상시 등)·방법(직접/위임 등) 등을 차등화하지 않은 경우

② **대표이사**의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시스템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지배구조법 §30의4제1항 제5·6호), 적절한 위임, 인적·물적자원의 투입* 등을 통한 점검·보고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예> 전체 인력규모, 영업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내부통제등 전담 조직의 편성, 주요 핵심·취약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③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가능했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객관적 위험평가, 위법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내부통제등 점검 결과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합리적인 문제 제기, 보완 점검, 대책 마련 등을 하지 않아 내부 통제기준등의 위반(발생 가능성 포함)을 인식·방지하지 못한 경우

* <예> 특정 부서 또는 점포의 단기간 실적 급등, 시장 환경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의 변동, 금융 투자상품의 판매 이후 대규모 투자손실 가능성 증대 등

⑤ 대표이사가 특정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특정 상품 또는 사업부문 관련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증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전담 조직 등 적절한 부서를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수행 과정·자료의 적정성(투자권유절차·자료 등의 적정성, 사익추구 여부 등) 검증 등 **예상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긍정적 요인)** ①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인 민원, 반복적·집중적으로 제기된 동종·유사 민원, 내부자 제보,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사실 등 **중요 현안**이 적시에 보고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

② 소관 업무의 범위 및 복잡성,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관련 위험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주기,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해 충실히 내부통제등 점검을 수행하였음이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③ 점검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기준등의 미비 사항, 운영상 문제점, 위반사실 등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해 즉각 시정조치, 인력·조직의 변경,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대표이사에게 대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예> 제도개선 방안 검토, 내부통제기준등 강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모의훈련 등

④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원의 업무경험, 전문성 등에 기반하여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문제제기,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점검 방법 등을 개선하였음이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⑤ 내부통제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등 관리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적합한 자(또는 부서)*에 위임하고, 위임한 권한 또는 업무 지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이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예> 위임된 권한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역량(충분한 시간과 인력에 대한 고려 포함), 전문성이 있는 자(또는 부서)

** <예> 위임된 내부통제등 관리업무 처리 내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절차·체계 마련,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 보완 지시 등

③ 내부통제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등 개선 실적 등

※ 적용례

- ☑ (부정적 요인) ①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부통제등의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조직의 조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의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 <예> 대표이사에게 준법감시인이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보고한 경우, 임원이 소관책무와 관련하여 실무부서의 내부통제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받은 경우 등
- ② 내부고발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익명 제보자에 대한 신원파악, 제보자에 대한 인사·업무상 불이익 등 내부고발자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 (긍정적 요인) ① 지배구조법 등 금융관련법령, 모범규준 등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보다 엄격한 수준의 내부통제기준등을 마련하여 운영한 경우
- ②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의 개선방안,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까지 검증한 경우
- ③ 동일·유사한 유형의 금융사고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의 재발 방지 등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정기적 감사 또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 등을 거쳐 내부통제등을 개선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④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문서 등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등

※ 적용례

- ☑ (부정적 요인) ① 내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문서, 기록, 녹음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 ② 임원의 소관 내부통제기준등에 회의체 등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의 기준, 의결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지 않아 해당 절차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예> 위원회 등의 심의생략기준의 구체성 미비로 대부분의 심의가 생략되어 운영되는 경우, 위원의 선정에 대한 통제 절차, 내부통제등 전담 부서 의견의 반영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의 임의적 운영이 방치되어 온 경우 등

- ☑ **(긍정적 요인) ①** 신규 사업·투자·상품의 추진 등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유관부서의 의견***에 대해 리스크 해소·통제 방안 또는 대안의 검토, (필요시)외부의 객관적 자문·조언(법률, 회계, 산업 전문가 등), 해당 유관부서의 재확인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였음이 관련 문서·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예>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가능성(준법감시, 법무), 고위험 투자·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방안(위험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신기술 도입 시 전산장애, 보안 침해 가능성(IT, 정보보안 등)

- ② 신규 업무추진 또는 기존의 업무관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법령 해석 등의 쟁점**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다. 상당한 주의 여부에 대한 소명

- 감독당국은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임원등에게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 임원등은 문서·이메일·전산시스템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관리의무를 사전에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소명할 필요

* 관리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후 사실관계, 구체적인 관리의무 수행 방법 및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이후 시정·개선·보완 등 지시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 사실 등

Ⅲ. 적용 방안

1 판단 절차 (Trigger 기준 등)

□ ①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②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 결정

○ (1차 판단: Trigger)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 개시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인정

※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

-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의 평소 관리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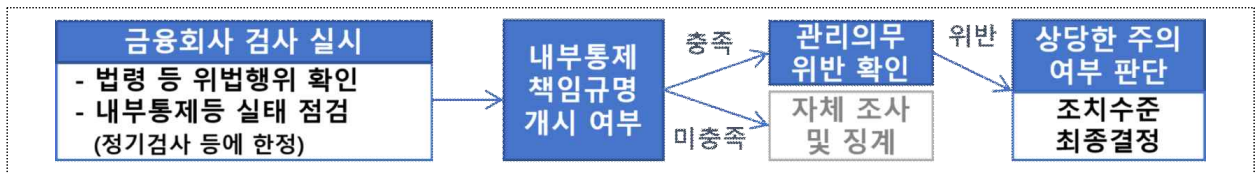
< '중대한 위법 여부' 예시 >

고려요소	세부 내용	중대한 위법(예시)
①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① 관리의무의 미이행	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미이행한 경우
	② 임원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등	금융회사의 사업목표·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무리한 판매 독려 과정에서 임원등이 불완전판매를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한 경우
	③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대다수의 점포에서 동일한 위법행위 발생, 특정 부서 또는 점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하여 조직적으로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④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동일 업무의 장기 근무 등으로 인해 횡령 등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기본적 내부통제 체계의 부재로 동일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되어 온 경우
	⑤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동종·유사한 민원의 대량 접수, 유사 위법행위의 재발 등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경우

고려요소	세부 내용	중대한 위법(예시)
② 위법행위 결과	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유출 등 피해·위반 규모가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인허가·영업행위 규제 취지를 형해화시킬 만큼 중대 또는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2차 판단: 상당한 주의)** 4가지 고려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결과 임원등의 상당한 주의 수준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양정 판단절차 >



나 제재 양정

- 최종 조치수준은 ①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②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 예정(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3> 개정 사항)

※ [참고] 조치 양정 시 감면 가능성 검토 예시

위법행위 결과 등 / 상당한 주의 수준	상	중	하
중 대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보 통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경 미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법행위 경위,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별표**주요 용어 설명**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용 어	의 미
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검사제재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위법행위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에서 정한 '책무의 근거법령'을 위반한 행위
내부통제등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등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임원등	대표이사등(지배구조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을 말한다) 및 임원